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아무도 몰라요”

### 광주시·전남도 자체 감사 ... 의회 눈치보기·봐주기 전국 지방의회 연 405억 집행하고도 감사는 요식행위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씹짓돈처럼 제멋대로 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감사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근거를 마련해 자체 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의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 심의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은 지방의회 사무처를 아예 감사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2010년 7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사무처는 당연히 지자체

감사 대상이다. 정례회·임시회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외한 예산·회계 부분에서 헬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보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도 2014년 1월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를 권고했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제주 나머지 8개 시·도는 지방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014년 한 차례 감사를 했을 뿐이다.

감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해 파악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

문이다. 계약 심사 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경비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사무처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작 주목해야 할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린다. 지자체 감사가 오히려 지방의원 비리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액수는 결코 적지 않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들에게 1인당 월 130~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4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의회 상황은 더 나쁘다. 광역의회 중 절반 가량이 형식적이나마 의회 사무처 감사를 하지만 시·군·구정의회를 감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활 25주년을 맞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토호세력의 권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는 시·도 간 교차 감사도 쫓는다. 지자체가 서로 다른 도의회를 맡아 감사하는 방식으로, 의회 눈치를 보거나 봐주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행법에 교차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자칫 지방의회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노후 교량 등 9곳 37억 들여 보수·보강

광주시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결함이 발견된 노후 교량 등 9곳을 8월까지 보수·보강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광신대교, 승용교, 우산교, 중앙대교, 광안고교, 송정고교, 하남 2지하차도, 용봉천 복개도로, 짙봉터널이다. 시는 모두 37억원을 들여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필요에 따라 재포장도 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한 지 10년이 넘는 무진교, 어등대교, 유촌3교, 벼들교, 우석교, 비아육교, 소촌고교, 문흥육교 등도 9억9천만 원을 들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현재 교량 206곳, 터널 24곳, 공동구(지하 매설물 공동수용 시설) 1곳 등 도로시설물 231곳을 관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노총과 조선업 구조조정 논의

이낙연 전남지사는 25일 도청 집무실에서 민주노총 전남본부(본부장 민정기) 임원진과 면담하고, 조선업중 구조조정 관련 서남권 조선관련 업체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 광주 양림동 ‘팽귤마을’ 일대 공예거리 만든다

### 시·남구, 연말까지 부지 등 매입완료 ... 2018년 운영

광주 도심 골목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떠오른 양림동 ‘팽귤 마을’ 일대에 공예거리가 조성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남구는 팽귤 마을 일대 4000여㎡에 공예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매입 등 준비를 하고 있다.

남구는 사업 부지 가운데 공·폐가 등 건

물과 부지 80%가량을 사들였으며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 17억5천만 원을 신청해 모두 3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지 매입과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 내년 1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이르면 2018년까지 공예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폐가를 리모델링하거나 허물어 주변을 단장하고 주민, 문화기획 전문가, 공예인 등이 참여해 서을 인사동 쌈지길처럼 인기를 끄는 주민 주도형 공예거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략 계획과 광주 공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포함됐다.

시와 남구는 부지활용 협의를 마치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쓰러질 듯 낡은 집이 늘어선 전형적인 옛 도심 골목을 연상하게 하는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주민과 예술인들이 추억을 되살리는 간판, 고장 난 벽시계, 액자 등을 설치해 가꾸기 시작했다.

양림동 일대 근·현대 문화유산과 아기자기한 공방 등으로 젊은이들에게도 인기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SNS를 통해 더 유명해졌다.

팽귤 마을은 동네 노인의 뒤뚱뒤뚱하는 걸음걸이를 보고 주민들이 붙인 이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에너지밸리 R&D센터 정치권 개입 자제를”

### 이낙연 지사, 국회의원 경쟁 과열 양상 우회 비판

### “국립한국문화관 후보지 경쟁력 갖춘 장흥으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25일 한국전력 에너지밸리 R&D센터와 관련 지역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R&D센터 유치에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광주와 전남도가 센터 입지를 둘러싸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다.

또 경쟁력을 갖춘 장흥이 국립한국문화관 후보지로 적합하며,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광주와 전남도의 행보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표방해온 상생 기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향후 양 시·도 상생 과제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낮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R&D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센터 입지는 지난해 12월 준공을 끝낸 나주혁신산단이 유력했으나 이후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남구에 들어설 도시첨단산단 내 R&D센터 유치에 나서면서 경쟁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일부 제공 등 인센티브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낀 한전 이 센터 입지 결정을 연기하는 등 지역 미래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표류하

고 있다. 이 지사는 “한전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기업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하는 선례를 남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 “상생은 좋지만 모든 일을 두루뭉술하게 함께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은 하되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광주와 전남이 유치전에 나선 국립한국문화관과 관련 “장흥군은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등 현대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문학계의 거장들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고장이며, 최근 한승원 작가의 딸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는데 문학적 정서를 제공한 곳”이라며 “이런 지역을 놔두고 국립한국문화관 부지를 다른 곳에 양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공무원 중심의 상생 과제 추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체장은 어느 정도 상생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일치하지만 이를 풀어내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행정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양 시도의 정부 라인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 같은 마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본격 가동

### 전남 최초 ... 준공식 가져

25일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가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어업인, 지역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금일수협 FPC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0억원을 들여 완도를 완도항에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 등을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이다. 운영은 완도금일수

협이 맡는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를 개선,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후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대화된 FPC를 통해 그동안 원물 그대로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여 더 높은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완도금일수협 FPC와 같은 유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